

### □ 프로그램

15:50 - 16:00 등록

16:00 - 16:10 인사말

16:10 - 16:30 국내에서의 이상적인 임상연구. 이원식 MSD Korea

16:30 - 16:50 임상시험 연구자의 역할. 문철 Aventis Pharma Korea

16:50 - 17:10 임상자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배균섭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17:10 - 17:30 다기관임상연구의 행정적 고려사항. 박영석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센터

17:30 - 17:50 대한방사선종양학 임상연구회(KROG)의 운영방향. 조관호 국립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17:50 - 18:00 질의 응답 및 맺음말

18:00 - 19:00 방사선종양학과 투어 및 식사

### 제3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출범

김영환(金榮煥) 과학기술부장관은 9월 19일(수), 제3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 23명을 새로 위촉하고 위원장에 장순홍 원자력안전위원(과학기술원 교수)을 위촉하였다.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허가, 방사선장해방어 등 원자력안전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게될 안전전문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 분야에 따라 원자로계통, 방사선, 부지·환경, 정책·제도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한편 19일 개최된 제10차 안전전문위원회에서는 영광5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 원전방호 및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원자로계통분과 위원 : 오세기 아주대교수, 국일현 원자력연구소하나로이용연구단장, 김창우 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과장, 성풍현 과기원교수, 모선일 아주대교수, 서균렬 서울대교수 이상 6명
- 방사선환경분과 위원 : 강희동 경북대 교수, 김승평 조선대교수, 이재기 한양대교수, 홍석일 원자력병원부원장, 사상덕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장, 최은경 서울중앙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과장 이상 6명.
- 부지구조분과 위원 : 장승필 서울대교수, 이종덕 전북대교수, 장태우 경북대교수, 오재호 한국자원(연)기획부장, 권성택 연세대교수, 김창우 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과장,

정희옥 군산대교수. 이상 7명.

- 정책제도분과위원 : 김영평 고려대교수, 은영수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전문위원, 박재원 중앙일보편집국산업본부장, 김창우 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과장, 이준현 부산대교수, 박기갑 고려대 교수, 민병주 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 7명

## 출연연구 여성과학인력 채용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내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을 늘린다. 과기부는 25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이 오는 2003년까지 신규채용 연구원중 10%의 여성인력을 확보토록 채용목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채용 목표를 달성하는 연구기관에는 인턴연구원 확보지원과 함께 정부지정 국책연구과제 선정시 가산점을 받게된다. 과기부는 이 제도를 여성인력 배출이 희소한 원자력, 기계, 재료, 자원분야에서 집중 실시하고, 연구원 10여명을 채용할 때까지 여성 과학자를 최소한 1명 이상 채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채용목표제를 효율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유망 여성과학자 강화지원사업을 펼치고 여자대학 연구기반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 불량 의료검사장비 '퇴출명령제' 도입

MRI, CT 등 화질 기준 이하면 사용금지- 정기국회 상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화질이 떨어져 검사 가치가 없는 CT, MRI 등 불량 의료검사 장비는 앞으로 당국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아 의료현장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9.19(수) 불량 의료검사 장비로 인한 오진 피해와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성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용 검사장비에 대해 사용금지명령을 발동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에 의뢰, 제반 의료검사 장비의 기계적 화질기준을 마련한 뒤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적용 대상 장비로는 MRI와 CT 촬영기외에 방사선 유방촬영기, 안과용 엑시머레이저 등 10여종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최초 설치면허 취득 후 5년까지 검사를 면제해주되 그 이후로는 1년내지 3년 주기로 정밀 성능검사를 실시, 불합격 장비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체를 거쳐 재검사에 통과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나, 대형기관들의 검사능력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검사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전국의료기관에 1천500여대가 설치돼 있는 MRI와 CT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